

RE100 국가산단 잡아라...광주·전남 등 유치전 ‘후끈’

정부, 내년 상반기 지정 예고...시·도 가장 앞서가 전북·경남·강원 등도 경쟁...국회 발의 특별법 3개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를 시범 조성하기로 밝힌 가운데 RE100 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별 각축전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RE100 산단 유치 경쟁에 뛰어난 곳은 광주와 전남 해남, 전북 새만금, 충남 태안·당진, 강원, 경북 울산, 경남 진주 등이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

안 생산기반을 토대로 해남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1호 시범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발전 사업 허가권 등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와 공공수도 개발사업 확대지원, 세제감면 등을 건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지난 달 24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전KDN, LS일렉트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주형 RE100 산

업단지 기획위원회’를 결성하고 RE100 산단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개최된 APEC 한·중 정상 및 정상회의에서 ‘새만금 내 한중 공동 RE100 산단 조성 협력’ 제안이 민생분야 실질협력 성과 사업으로 논의됐다며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지정 정책과 연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 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의 수력 및 태양광, 강릉의 바이오매스 및 풍력, 백두대간 및 패랭 지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토대로 RE100 산단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쟁력이 약화된 동남권 주요 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대체하기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을 포함한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 문신식 제1차관은 지난 3일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1호 프로젝트를 가 나을 듯 하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공주에서 연 산업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세 가지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정부안과 협의해 확정 지을 것”이라며 “민생·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있고 여야의 큰 이견이 있는 이슈가 아닌 만큼 일법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지난달 10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30일 같은 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읍)이 지난달 30일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단을 국가가 조성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 순환 구조 제도와 인센티브 부여를 담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지원 특별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국가 산업단지’를 지방에 조성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RE100 및 에너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 입지와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후보로 떠오를 거고, 울산같이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 곳들”이라면서 “서남권 그 다음에 울산 이런 정도가 RE100, 이번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산단에 기본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취업 멘토링 상담받는 구직희망자들 5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청년일자리스타이션 2025 취업멘토링 패스타에 참석한 구직 희망자들이 취업 멘토링 및 청년 정책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양철강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전남도 민관협의체 개최...‘K-스틸법’ 제정도 건의

전남도가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 협의의 장을 열었다. 산업구조 전환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5일 광양만권소재부품자식산업센터에서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 철강산업의 생존·전환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해 광양시·순천시 관계자, 철강 관련 기관 및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광양은 국내 조강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의 핵심 거점이지만, 최근 국제 무역환경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유입,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이 겹치며 중소 철강업체의 경영난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광양시 철강기업의 최근 2년간 생산량은 9.4%, 수출은 19.3% 감소했다. 지방소독세 부과·징수액도 같은 기간 76%나 줄어들며 지역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실태조사, 기업 의견 수렴, 맞춤형 사업 발굴을 추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위기를 단순한 경기침체로 보지 않고 산업 체질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민관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철강산업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 설비 전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스마트 제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광양만권을 ‘스마트에너지 기반 친환경 철강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가기간 산업 지원 특별법(K-스틸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지원과 규제특례, 전기요금 인하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가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 협의의 장을 열었다. 사진은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진행 모습.

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305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1985원 높아...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전남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적용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2305원(월257만1745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수준으로,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985원 높은 금액이다.

2026년 생활임금은 2025년(1만930원)보다 375원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올해(249만3370원)보다 7만8375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이 2026년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 후 결정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외와 공공근로 등 국가 동원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서순우 전남도 일자리투자자유지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남도의 생활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전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11년째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김치축제 역대 최고 매출...민생회복 축제 ‘도약’

5만7000명 방문...천인의밤상·농산물마켓·체험행사 성황 김치마켓 등 10억3800만원 매출 달성...전년보다 26.7% ↑

‘광주김치축제’가 역대 최고인 10억3800만원의 매출을 달성,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 축제’로 도약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날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시청 일원에서 개최한 ‘제32회 광주김치축제’에 5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고, 10억3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린 축제는 시청 앞 도로를 ‘자 없는 거

리’로 조성해 김치마켓과 농산물마켓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방문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했다. 이에 방문객과 입점 업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치마켓은 첫날부터 긴 줄이 이어져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은 조기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축제는 유명 가수 없이도 천인의 밤상, 김치마켓, 푸드쇼 등 대표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콘텐츠로 구성,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 문화누리카드 사용 등으로 실질적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축제기간 10억3800만원의 매출을 달성, 전년보다 26.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행사기간 김치팝업 및 대통령상 수상작품 전시, 대한민국명장 ‘안 유성쇼’, 대통령상 김치명인 마스터 클래스, 김치놀이터, 김치체험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했다.

또 청년상인 공동 판매전, 소금체험관, 소금진흥연구센터의 전일업 이력제, 오뚜기 팝업, 공무원 문화축제, 달빛 합동공연 등 전국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축제 기간 광주의 대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K-미식벨트 특별코스(김치타운-양동시장-광주김치축제)’도 연영대 외부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미식도시 광주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한편 첫날 예정돼 있던 ‘K-김치파티’는 인근 화재로 인한 연기 유입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조기 종료됐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국장은 “올해 광주김치축제는 실질적 경제효과와 지역 상생의 가치를 동시에 보여준 축제였다”며 “광주만의 고유한 김치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 지방대 추천 인원 확대

정부가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 소재 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인사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역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제도다.

이때 대학별 추천 몫은 기존 8명에 대학 정원에 비례해 추가됐는데, 기존에는

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되던 것을 500명당 1명씩 추가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최대 12명으로 제한했던 추천 인원 상한도 폐지에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를 늘렸다.

인사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추천 기준은 다음 달 지역인재 7급 모집 공고에 포함돼 내년도 선발시험

▶1면 ‘광주 NPU전용’서 계속

정부는 현재 국가 과학기술AI연구소와 범용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국가AI 연구소 설립 예산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 국회 심의 중이다.

강 시장은 “국가AI연구소 광주 설립을 통해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AI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자·산·학·연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AI데이터센터, AI영재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AI 이노스페이스 등이 위치한 첨단3지구 일원을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따라 국가AI 집적단지로 지정받아야 한다”며 “이 지역을 메가샌드박스형 실증도시로 만들어 세계 최초의 규제 없는 AI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AI 실증도시 전략은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국가AI연구소 설립, 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그리고 메가샌드박스형 국가 AI집적단지 지정”이라며 “광주가 꿈꾸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 광주에 주어진 역할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AI 실증도시 구현을 통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